

(통권 21-5호)

예산·재정정책 정보

본 보고서는 충청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전체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l : 635-5205)

2021. 4. 16.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페이지
I. 경제	1. 코로나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 도래하나	1
II. 재정	2.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 를 위한 전용펀드 도입방안	3
III. 정책	3. 충남의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추진 성과와 평가	5
	4.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6
	5. 1인 가구 에너지 소비 특성과 절감 방안	8
	6. 2021년 교육부 정책 방향 － 학교의 일상 회복, 미래교육 도약	9
	7. 공주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사례와 시사점	11
IV. 법률 제·개정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의원 등 12인) － 자경농민 등록면허세 면제	13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0인) －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 과세대상 추가	14

1. 코로나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 도래하나

-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 주요국이 확장적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
 - 2016년 이후 유지된 긴축통화정책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정책 금리 인하와 채권매입확대 등 확장기조로 전환, 통화량 증가
 - 주요국 노동시장 경색 해소, 한계사업자 지원정책 강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임금 감소지원, 수요위축 해소, 유동성 지원
- 세계 주요국의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PMI 및 경기선행지수가 개선됨에 따라 수요 회복 기대
 - 2021년부터 글로벌 주요국 GDP갭의 마이너스폭이 축소되면서 수요가 완만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
 - 또한 글로벌 PMI 및 OECD 경기선행지수가 개선됨에 따라 향후 실물경제 회복이 기대
- 국제유가와 산업용 금속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
 - 국제원자재 가격이 회복세를 지속하여 코로나 이전 수준 도달
 -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도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 상회
- 이상기후, 공급 차질, 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세계 식량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
- 국제사회의 저탄소 사회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비용 부담 및 투자 확대가 물가 상

승 압력으로 작용 우려

-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탄소국경세 도입 및 친환경·저탄소 설비 투자 확대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우려

○ 수요견인 인플레이션보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

-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충격이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함
- 생활물가 안정을 통해 가계 실질구매력 약화방지, 가계소득 확대를 바탕으로 가계 소비여력을 확보하여 서민 경제부담 완화
- 글로벌 식량가격 상승 영향이 국내 식탁 물가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 조절 기능 강화, 안정적 식량 확보 노력 필요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국토정책 Brief, 2021. 2)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2.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전용펀드 도입방안

-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사업 진출은 정부의 정책 지원 없이 민간금융기관을 통하여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대기업 중심 활용
-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대규모 민관협력 인프라펀드 조성, 중소·중견 기업의 펀드 활용도는 매우 미흡
 - 미흡 사유는 기업 신용도위주 평가, 중소·중견 기업 자기자본 부족, 환매금지로 투자자금 회수 불가, 낮은 신용도 등임
- 저금리시대를 맞아 시중 초과잉 유동자금은 국내 주식 및 부동산 편중, 이를 흡수할 만한 해외 대체 투자가 필요
- 사업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은 토지매입 비용이 없어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향, 신용도 부족으로 민관협력 펀드 활용이 저조, 공공펀드가 사업주의 초기 시드머니 지원 필요
- 신용도 보강, 초기 개발자금 지원, 자금회수 구조 기능을 갖춘 전용 펀드로 중소·중견기업의 공동사업추진체계에 투자 필요
 - 신용보증 모태펀드로 토지·건축물·시설물 매입펀드 구성 필요
 - 장기간 도시개발·인프라 사업 투자 시 세컨더리 펀드 도입을 통해 투자자의 기간리스크 해소, 기획단계부터 투자 필요
 - 무한 및 유한 책임조합원이 함께 추진 가능한 투자합자조합과 같은 공동사업수행 및 공동투자의 사업추진체계 필요
- 농식품 세컨더리펀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성한 농식품 모태펀드에 포함된 2백억 규모의 투자펀드로, 열악한 업체 단순보조와 융자지원에서 벗어나 적극투자를 통해 경쟁력 확보
- 디지털유통플랫폼 사례
 - (크라우드펀딩) 해양수산부는 기본교육 실시, KOTRA도 크라우

드펀딩 업체들과의 상호연결 지원, 미국은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 전 단계별로 자금조달까지 성공

- (디지털유통화증권) 2018년 설립된 카사코리아는 우리나라 최초 블록체인기반 DABS 유통플랫폼 구축, 부동산 투자플랫폼인 영국의 비트렌드는 RFID, BIM 등 기술 이용

○ 중단기 실천방안

- (세컨더리 펀드 도입) 규모가 크고 자본순환도 장기간 소요되는 세컨더리펀드의 만기설정, 환매사항 등이 특수하게 규정, 투자기간 3년, 회수기간 7년 이상으로 무한책임조합원 투자 유도
- 비상장 유통플랫폼 및 상장시장 활성화, 투자합자조합 사업추진

○ 중장기 실천방안

- (모태펀드 마련) 사업주의 시드머니 부족으로 인한 토지매입의 어려움을 공공펀드 조성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주·물권 거리 디지털유통플랫폼 활성화) 공급자와 수요자 간 간접투자 매개자를 생략하고 직접 투자의 매커니즘 마련

○ 중단기적으로 세컨더리 펀드 도입으로 기간리스크 해소를 위한 중간회수시장 창출 및 회수구조체계를 완성해야 함

○ 신용도 부족으로 인한 펀드 활용도 미흡을 해결하고자 중소·중견기업 전용 모태펀드를 인프라 및 도시개발 분야에 조성

○ 중소·중견 기업 전용 펀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활성화

출처 : 국토연구원(국토정책 Brief, 2021. 3)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3. 충남의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추진 성과와 평가

- 해양쓰레기는 발생원인자가 특정되지 않기에 쓰레기 표착이 발생한 기초지자체에서 수거처리의 업무 담당
 - 충남도는 서해안의 조류 및 계절풍에 따라 타 지자체 및 외국쓰레기까지 유입되고 있어 초광역적인 수거지원시스템도입 필수
- 해상기인쓰레기는 조업 중 어구의 해상불법투기 근절 중요
 -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부유쓰레기는 바다로 유입되기 전 사전 차단시설을 통해 일차적으로 수거
 - 하천변 생활쓰레기를 사전에 수거토록 하여 하천유입 원천차단
- 반복되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는 일차적으로 개인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 관심과 실천 중요
 - 해양수산부는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마련, 전주기적 해양쓰레기관리 강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50% 감축 목표
- 단계별로는 발생예방단계에서 기초자료 수집과 하천하구에서의 쓰레기 유입차단시설 도입 등 인프라구축 필요
 - 수거·보관 단계로서 신속한 수거와 보관을 위한 자원확충 중요
 - 운반처리 단계로 해양쓰레기의 장기간 방치를 막고, 신속한 선별/처리 과정을 통해 재활용 자원으로서 활용도
 - 이를 위해서는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의 도입과 함께 전용집하장, 전용 운반차량 및 선박 등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
- 해양쓰레기 문제는 바닷가에 위치한 지자체만 노력 해결 곤란
 - 일회용품 사용 감소, 분리수거 철저 등 **작은 실천** 필요

출처 : 충남연구원(열린충남, 봄호 vol 92)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4. 인구정책 전망과 과제

- '21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반 신인구정책 출발
 - 1~3차 계획에서는 출산율 반등을 목표,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음
- 출산율 회복을 목표로 한 정책은 여성을 출산도구화한 반인권적 정책이라는 비판, 출산율 회복에도 효과가 없는 정책으로 지적
- 2020년말 인구 51,829,023명으로 2019년 비해 20,838명 감소
 - 2020년 출생자수 30만명 붕괴되어 역대 최저치(275,815명), 사망자수보다 낮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 발생
 - 2040년 60~70대 고령층규모가 커지고 유소년인구가 적은 모습
- 산업화에 따라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2000년대 이후 감소하던 수도권 전입의 규모는 최근 다시 증가
- 낮은 출산현상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결과가 아닌 노동시장과 교육제도, 복지제도 등의 사회구조속에서 나타난 비자발적 선택이라는 판단임
- 급격한 변화로 인한 파급효과를 감소시키는 완충적 역할의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정책의 균형이 요구됨.
 - 완화 정책은 인구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출산과 관련 정책, 적응 정책은 변화하는 인구변동에 적절히 적응하기 위한 정책임
-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급격한 인구변동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함과 개인의 자발적인 가족 형성과 확대 욕구를 충족시켜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 위함
-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로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 대응 사회혁신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였음

-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 둘째,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셋째,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넷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응을 제시함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15년간 ‘출산을 반등’의 정책 목표를 ‘개인의 인권’, ‘삶의 질’로 전환하여 수립된 첫 번째 기본계획이며, 변화하는 인구변동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또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보장성 확대와 강화를 눈여겨볼 만함. 마지막으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다양한 인구 변동 현상 중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현상에 새롭게 주목하였다는 측면에서도 함의를 갖음
- 많은 기본계획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조율과 협력의 중요성이 매우 높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정과 모니터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정책과제의 구체성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향후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됨
- 향후 5년간은 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 정책과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달성하고, 장기적 성격의 과제에서는 관련부처와 우리 사회가 끈기 있게 논의와 추진을 계속해야 하며 관련 영역이 매우 광범위함을 고려하여 국가의 장기계획으로의 전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포럼, 2021. 1)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5. 1인 가구 에너지 소비 특성과 절감 방안

- TV나 공조기기 등 생활기기를 1인만을 위하여 구비하게 되므로 비효율적 에너지소비 경향, 1인 가구의 증가는 에너지소비 증가
 - 에코마일리지 1인 가구 회원의 에너지사용량 분석 결과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가구당 에너지소비량은 증가
 - 5인이상 가구소비량이 1인 가구의 소비량보다 1.3배 전기 사용
- 가스소비량도 5인 이상 가구소비량이 1인 가구 소비량 1.5배, 수도와 지역난방 소비량은 각각 약 2.3배, 2.9배 높음
 - 전기는 1인가구소비량이 5인가구 3배, 수도와 지역난방은 2배
- 학생 및 직장인 1인 가구의 경우, 다소비형 가전기기의 전력소비량이 높고, 사용 시마다 제품가동이 필요한 세탁기 등의 등급별 에너지소비 차이가 컸음
 - 빌트인제품 성능을 결정하는 임대인의 에너지절감 인식과 행동 없이는 1인 가구의 전력소비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
 - 소득 적은 젊은층 1인가구의 가전기기 소비패턴 분석 필요
- 노인인구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 에너지사용량이 높아짐
 - 노인 1인가구의 가전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바꾸면 25% 감소
 - 일괄적인 에너지절감 방안보다는 대상별 특성을 고려 필요
- 고령 1인 가구는 기존의 가전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에너지효율이 낮은 과거 모델의 가전기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래된 가전기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고효율 에너지 가전기기로 교체·구매 필요

출처 : 서울연구원(연구보고서, 2020. 10)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6. 2021년 교육부 정책 방향: 학교의 일상 회복, 미래교육 도약

- 코로나19상황에서 교육격차가 심화 우려,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미래교육** 필요
- 교육부는 학습, 방역, 정서안전망 구축을 통한 **학교의 일상 회복**, 학생 한명 한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미래교육 선도,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핵심
- 학생 발달단계상 대면수업의 효과가 높고 **교사지원이 필요한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 학생 등은 우선 등교** 지원하고 안정적인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학교 현장에 지원 예정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학습격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고, 학습의 영역을 넘어서 정서, 돌봄 영역까지 세심하게 살필 예정



- 코로나19 대응을 넘어서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변화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교원 등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
-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고교학점제는 마이스터고 2학년까지 적용이 확대**되며,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됨

- 국민의 생애 단계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임
- 평생교육 훈련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학습 훈련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법정부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가칭 평생배움터)을 구축하고, 전문대학은 단기직무과정부터 고숙련전문인재 양성까지 다양한 수준의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대를 시범운영
- 특성화고는 산업과 지역 수요에 대응해서 자발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내직업계고,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하여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제공하고 후학습을 통한 역량계발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신설
- 국가차원의 미래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역 학교 중심의 교육자치 강화 등 교육 분야 거버넌스 개편을 지속 추진
- 코로나19를 현명하게 극복하며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우리 교육의 더 큰 도약을 시작하는 한 해로 삼을 것임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교육개발, 2021. 3.)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7. 공주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다른 문화영향평가 사례와 시사점

- 공주문화도시 문화영향평가결과와 주민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총 7개 분야와 7개 전략과제, 14개 세부사업 제안
- 사업분야를 살펴보면, 문화영향평가 지표에 관련된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등의 평가영역에 근거하여 제시
 - 전략과제와 세부사업 역시 평가지표와 고려사항 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으로 구성
- 특히, 공주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시 문화영향평가의 적용사례를 살펴보면서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
- 첫째, 공주시와 같은 지방문화도시 문화영향평가 제도장치 도입
 - 2020년에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경상남도 창원시 등이 문화영향평가 수행,
 -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과 기초지자체 중 서울 성북구, 성남시 및 춘천시가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자체적인 문화영향평가 준비중
 - 충청남도과 공주시 및 부여군 등과 같은 역사문화와 문화중심도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
- 둘째, 문화영향평가의 의무적 대상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실행
 - 의무적 대상으로 고려 사업은 ①문화도시 사업 ②도시 재생사업 ③문화재(문화유산) 복원·활용사업 ④공간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사업 ⑤관광개발기본계획 ⑥문화 및 집회시설 조성 ⑦도시기본계획 ⑧지역관광개발 사업 ⑨도시(재)개발사업
 - 충청남도과 각 시군에서도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 고려
- 셋째, 사업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평가풀 선정하여 평가

대상들의 개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평가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영향평가 지표는 공통지표로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과 특성화지표로 구성
- 서울특별시의 평가지표는 문화기본권으로 향수권, 참여권, 경관환경권, 기반조성권 등과 문화다양성으로 시민다양성, 차이수용성, 정체성, 예술다양성 등을 평가영역
- 충남과 각 시군에서 문화영향평가의 지표영역을 구성에서도 중앙정부의 평가지표를 근간으로 한 지역특성의 평가지표풀 구성

○ 넷째, 평가절차와 방식도 사업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 공주문화도시는 제3의 기관에 의한 전문평가의 기본평가가 적용
- 이는 기존의 자체평가에서 진단평가와 약식평가 및 전문평가의 기본평가와 심층평가 등의 평가유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따라서 사업유형과 규모 등에 따라서 평가절차와 방식도 대상사업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

○ 다섯째, 문화영향평가의 특성화지표에 대한 평가를 강화

- 공주문화도시의 문화영향평가 지표를 각 사업별로 문화영향과 관련 사업을 분석한 결과,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등 3가지의 평가지표영역만을 검토
- 공주가 역사전통중심형 문화도시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를 원형으로 한 문화도시의 주요사업과 활동에 공주의 특성화 지표도 반영된 관련 사업을 검토하여 차별화된 문화도시로 육성

출처 : 충남연구원(열린충남, 봄호 vol 92)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올해 2021년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 그런데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농림어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잦은 이상기후(장마,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한편,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있는 농촌지역에 영농의사가 있는 새로운 농업인을 유인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등에 대하여 2021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출처 : 행정안전위원회(입법예고기간 2021.03.23. ~ 2021.04.01.)

원문은 e-mail에 첨부함

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은 1987년에 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 하지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산, 그린뉴딜과 같은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외양의 자동차로서 삼륜, 사륜 등의 자동차가 확산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만으로는 현실상 통용되고 있는 모든 이륜자동차 형태의 자동차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한 서로의 의미가 각각 다르게 통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 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출처 : 행정안전위원회(입법예고기간 2021.03.23. ~ 2021.04.01.)

원문은 e-mail에 첨부함